

충남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 경 숙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1. 한국 다문화 이슈의 의의

21세기 세계화된 현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민족 및 이민 문제의 부각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 이외의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이민국가로서 이민정책,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문제의 부각은 타 국가들과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다인종·다민족화 이슈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이라면,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슈는 국제결혼문제로부터 부각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 거주자와 달리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영주할 것을 전제로 입국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자의 등장은 외국인 노동자 등 다수의 이주민의 현실과 대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다문화사회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주민 정책을 새롭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등 한국의 이민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속

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들이 잠재적인 문제집단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비롯된 우려가 아니다. 한국사회가 광범위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사회 체계,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등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히 인구부족과 노동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규모에 따른 중요성보다는 향후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이민자 수용의 인식과 사회체계, 상호통합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충남의 다문화 현황과 도민 인식

충남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5년 13.1%로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8년 12.7%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80%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1,514명, 2007년 2,190명, 2008년 3,048명, 2009년 3,718명으로 3년간 59.3%가 증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분포는 2007년까지 재중동포를 포함하는 중국출신 여성이 가장 많았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0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조화성 박사가 실시한 충남 도민의 다문화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민의 다문화 인식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적부여의 기준 설문에서 현 혈통에 기반한 속인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출생지에 기초한 속지주의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부모의 인종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8%가 동의, 5점 평균점수는 3.83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모가 한국인인 것보다 한국의 법,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68.1%가 동의하고 있는 것

* 『한국인의 다문화인식과 통합정책의 새로운 모색』, 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09.10.13)

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혈통-문화적 정체성 못지않게 정치-법적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과의 사회적 거리감 항목에서는 한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조선족, 친구로 지내는 것에 대한 선호는 미국인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장기간 거주한 결혼이주민에게 출신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3.2%)이 동의한다는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민의 다문화의식 조사결과에 기초해볼 때, 도민의 다문화 의식은 결혼여성이민자 등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차별은 벗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 규정에 대해서도 혈연중심적 사고로부터 시민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과제는 먼저, 가족갈등예방 및 가족통합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에도 2004년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총 이혼의 1.8%에 불과하였으나 매해 증가해 2008년에는 9.2%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가 주관하는 속성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갈등예방을 위한 가족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역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 확대, 방문서비스의 확대, 각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미비, 또는 지리적, 개별가족의 환경 등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가 장애인인 다문화가족, 국적미취득자로서 무자녀인 사별 혹은 이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충남의 경우 농촌 지역과

같이 서비스의 전달에 편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화된 농촌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전달모형 및 관련 정책들을 개발·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이주의 배경(본국의 가족의 부양 혹은 지원)으로 인하여 취업 등 경제적 참여의 욕구가 강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녀교육, 가족 생계 등을 위하여 취업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역량강화의 영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직종개발과 취업 연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문화가족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다문화 관련 위원회 참여, 학부모 모임 등 참여, 마을조직, 자치회 등 주민으로서의 참여와 역할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 자녀 관련 문제는 크게 부적응, 학대, 교육 소외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가 외조부모에게로 보내지거나 농어촌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자녀(조손가정)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체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저해 및 지역의 차세대 인구유출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차세대의 부적절한 양육 및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도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으로부터 주변의 부모, 또래집단(친구), 교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통합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방법의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강제로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녀의 부적응과 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가 아닌 청소년기에 이중언어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향후 투입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다문화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이주민들과의 쌍방향의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이주민과의 문화적 접촉이 확대될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